

# KIEP 한중경제 포럼

##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5-03호 / 2005년 3월 29일

### 제10기 전인대 3차회의의 주요 내용과 의의

린자오무(林兆木)

國家發展改革委 宏觀經濟研究院 교수

中國 第10屆 全國人民代表大會 대표

#### I. 발표요지

##### 1. 2004년도 경제·사회발전 현황

- 2004년 중국경제는 높은 증가율을 보인 외국인투자과 수출에 힘입어 GDP 성장률 9.5%를 달성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량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에 영향을 받아 2004년초 목표치였던 3%보다 다소 높은 3.9% 증가함.
- 2004년도 중국경제의 주요 발전 내용은 <표-1>을 참조.

\* KIEP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경제 현안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심층 파악하고, 정책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리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경제포럼>을 운영, 매월 정기 세미나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유관부처의 고위관리 및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며, 한국측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부문 인사, 한국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표-1> 중국의 2004년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실제 규모	전년대비 증감율 (%)	비고
GDP	136,515 억RMB	9.5	
전사회고정자산투자	70,073 억RMB	25.8	
대외무역	11,548 억달 러	35.7	
	수 출	5,934 억달 러	35.4
	수 입	5,614 억달 러	36.0
외국인직접투자	606 억달 러		도착기준
외환보유고	6,099 억달 러		'04년말 기준
전국재정수입	26,356 억RMB	21.4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영업이익	11,342 억RMB	38.1	
도시신규취업자수	980만 명		'04년초 목표치보다 80만 명 증가
도시등록실업률		4.2	
소비자물가상승률		3.9	'04년초 목표치는 3.0%
전사회소비재소비총액	53,950억 RMB	13.3	가격요인 제거시 실질증가율은 10.2%
식량 총생산량	4,695억 kg	9.0	전년대비 388억 kg 증가

주: \* 규모이상 공업기업은 연매출액이 500만 RMB 이상인 기업을 의미.

□ 2004년 경제체제개혁의 주요 내용

- 식량수매시장의 전면 개방<sup>1)</sup>
- 대형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혁을 촉진하고 국유자산관리감독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구축

1) 2004년 9월 3일 상해시가 발표한 식량수매시장개방 내용에 따르면, 본래 국유기업만이  
담당할 수 있었던 식량수매를 일정조건(창고, 실험설비, 자본금 3만 RMB 이상 등)을 갖  
춘 개별 기업에게도 개방한다고 밝힘.

- 금융개혁 추진
  - o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의 주식제 개혁 진행
  - o 농촌신용협작사 개혁에 대한 시범사업 범위 확대
  - o 금리시장화개혁 진일보 발전
- 투자체제 개혁 방안 실시
- 농업특산세 폐지(단, 연초 제외) 및 농업세 감면조치 시행
- 동북 노(老)공업기지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개혁조치 시범 실시
- 수출환급세제도 전면 개혁
-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459개 행정심사비준항목을 폐지 또는 재조정

□ 지속적인 도시주민생활 개선 노력

- 정년퇴직자(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양로금 기준과 일부지역의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기준이 제고됨.
- 도시의 4대 보험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기본양로보험 1.63억 명, 기본의료보험 1.24억 명, 실업보험 1.06억 명, 산재보험 6,823만 명을 각각 기록함.
-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9,422원을 기록함.
- 한편, 농민 1인당 순소득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2,936원을 기록함.
- o 농촌지역의 절대빈곤인구(2004년말 기준)는 전년대비 290만 명 감소하였고, 저소득층도 4,907만 명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640만 명 감소함<sup>2)</sup>.

2) 절대빈곤인구는 연간소득이 668 RMB 이하인 소득자를, 저소득층은 연간소득이 669~924 RMB인 소득자를 지칭함.

□ 원자바오(溫家宝) 총리가 《정부공작보고》에서 밝힌 정부사업추진에 있어서의 6개 원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될 것임.

- ① 과학적 발전관의 지속적인 추진 및 건설
- ② 거시조정정책의 유지 및 개선
- ③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④ 전체와 부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처리
- ⑤ 객관적 규범에 따른 집행
- ⑥ 인민대중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처리

## 2. 중국경제의 주요 문제점

□ 경제운행상의 근본적인 모순

- 농업부문의 기초가 약해 식량생산 및 농민소득 증가를 어렵게 함.
- 고정자산투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상존
- o 석탄, 전기, 석유, 운수업 부문은 아직까지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임.
- 비교적 큰 물가상승 압력

□ 사회 불안정요인 존재

-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 위생, 문화수준
- 도-농간 및 지역간 경제적 격차와 소득격차의 확대

□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모순

- 취업문제

- 불합리한 경제구조, 낮은 산업기술수준, 낙후된 3차산업
- o 높은 투자율에 반해 낮은 소비율
- o 조방형 경제성장방식, 제한된 자원, 환경파괴 등
  
- 경제사회발전을 제약하는 체제 및 메커니즘상의 모순 존재

□ 정부부문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순

- 정부자체의 개혁 및 변화속도가 매우 느리며, 지나치게 많은 행정심사비준이 여전히 존재
  
- 취약한 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 기능
  
- 일부 부문간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조화로운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함.
  
- 낙후된 관리방식과 낮은 업무효율
  
- 주민이익과 직결된 일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
  
- 일부 공무원들의 법률에 의거한 정책집행 의식이 부족함.
- o 형식주의, 관료주의, 속임수, 사치, 낭비, 부패문제 등이 심각한 상태임.

**3. 2005년 주요 경제정책 및 목표**

□ 거시경제조정정책의 유지와 경제성장률 8% 달성

- 최근 2년간 에너지, 원자재, 운송부문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석탄, 전력, 석유, 운송부문은 여전히 공급부족상태임.
- o 따라서, 8% 성장목표치는 원자재공급과 환경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임.

- 토지이용 심사비준 강화, 신용대출 억제 등을 통해 고정자산투자의 과도한 증가를 지속적으로 통제할 것임.

o 특히 철강, 시멘트, 코크스 업종 등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투자구조 고도화를 추진

- 경제운행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여 석탄, 전력, 석유, 운송부문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

o 이를 위해 대규모 석탄기지건설과 천연가스개발을 지원하고, 계절별·시간대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하여 전력수요관리를 강화

o 식량, 석탄, 석유, 화학비료 등 주요 원자재의 수송을 우선적으로 고려

- 산업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o 기계산업의 진흥, 첨단산업 및 정보산업의 발전,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해 지원

o 금융, 물류, 정보, 법률, 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완비

- 자원개발계획 및 관리사업과 환경보호사업을 더욱 강화

o 에너지절약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 개발 등을 통해 순환경제(recycle economy)의 발전을 촉진

o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도시생활쓰레기, 생활오수처리, 재활용시설 등 환경보호사업의 강화

- 서부대개발, 동북 노공업기지진흥전략, 중부지역발전정책, 동부연안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 지역별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

□ 도시의 신규 일자리 900만 개 창출, 도시등록실업률 4.6%로 통제

- 전역군인, 대학 졸업생 등 2005년 신규 취업 희망인구 1,100만 명, 실업

또는 정리해고자 수 1,300만 명, 대규모 농촌노동력의 도시유입 등에 따라 도시의 취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임.

- 이에 중국정부는 제3차 산업, 중소기업, 노동집약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취업확대를 위해 노력
- 또한, 취업과 관련된 지도사업, 교육,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취업감시경보 체계를 도입하며 기업의 감원행위와 관련된 제도를 구축해나갈 것임.

□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4% 수준으로 통제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이 예상됨.

- 석탄, 전력, 석유, 운송부문의 공급부족현상, 생산원가 상승, 제품가격 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 국제적인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시장가격 상승
-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일부 지방정부의 가격조절조치로 인한 공공부문과 서비스부문의 가격 상승
- 자본, 토지 등 생산요소부문의 개혁과 노동자 임금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
- 따라서, 중국정부는 거시조정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신용대출 총액을 통제하며 고정자산투자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여 생산원가상승을 방지
- o 이에 따라, 2005년 전사회고정자산투자는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무역 15% 성장과 수출입 균형

- 중국정부는 대외무역경영권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수출확대를 도모함.

- 또한, 국내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입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됨으로써 대외무역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임.
- 다만, 국제적인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과 무역마찰의 증가가 예상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러나 15% 성장 목표는 대외무역성장방식의 전반적인 변화와 수출입 상품구조 고도화 등을 유도하여 대외무역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것임.

□ 2005년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과 농민의 1인당 순소득은 각각 6%와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경제의 고성장 유지, 농업증산과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부조치, 기업의 효율 제고, 사회보장정책 강화 등에서 비롯됨.
- 또한, 주민소득수준의 상승은 내수확대, 소비구조의 고도화, 소비자환경 개선 등으로 이어질 것임.
- 소비수요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2005년 전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1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농업지원정책을 강화하여 농민소득 증대를 도모

- 592개 국가빈곤구제(扶貧)중점 현(懸)에 대한 농업세를 폐지하고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제도를 완비함.
- 경지보호제도를 실시하는 등 농업의 종합생산역량을 강화

- 농업과학연구에 대한 재정투입 증액 등 농업경제구조조정 강화
- 농산물 가격안정과 함께 화학비료 등 원·부자재 공급 및 가격안정 도모
- 농촌노동력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농민공예 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인 확대

- 대형국유기업의 주식제 개혁을 더욱 확대하고, 국유자산감독관리체제를 완비하여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함.
- 전기통신, 전력, 민간항공 업종 등에 대한 개혁을 완성하고 적절한 시기에 우편서비스 체제개혁 방안을 추진함.
- 또한, 철도부문의 체제개혁방안을 연구·검토함.
- 비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한 각종 조치를 제정하고, 중소기업촉진법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관철시켜 나감.
- 동북지역에서 시범 실시 중인 소비형 부가가치세 도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성(省)급 이하 지방정부의 재정 및 세무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업의 채권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융자경로를 확대함.
- 금리의 시장화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민폐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환율메커니즘을 마련
- 투자체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고 관련 세부조치를 시급히 제정

- 은행, 보험, 증권, 유통, 전기통신, 관광 등 서비스부문의 대외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
-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 현재의 인구정책을 유지하고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7%이하로 통제

#### 4. 2005년 경제정책의 특징

□ 금번 전인대에서는 2005년 거시경제정책의 전반적인 기초를 안정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双穩健)으로 결정함.

□ 재정안정정책

- 2005년 중앙재정의 적자규모를 전년보다 198억 RMB 감소한 3,000억 RMB로 통제함으로써,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까지 감소시킴.

- 재정지출구조도 일반적인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신 중서부지역 및 농촌지역의 교육, 위생, 문화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강화함.

○ 또한, '3농 문제' 해결, 사회발전과 지역간 조화, 취업확대, 사회보장제도 완비, 저소득층 생활 보장 등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함.

- 장기건설국채 발행 규모는 전년대비 300억 RMB 감소한 800억 RMB로 축소하고, 국채자금의 투입방향과 구조를 조정함.

○ 중앙예산 중, 통상적인 건설자금을 100억 RMB 증액함.

- 금년도 국채자금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될 것임.

○ 농촌지역 인프라 및 주요 수리시설의 건설 강화

○ 식량생산, 기초교육, 공공위생체계 등에 대한 지원

○ 생태건설, 환경보호, 자원절약, 순환경제 부문에 대한 투입

○ 서부대개발, 동북 노공업기지 구조조정 및 중부지역 주요 프로젝트 지원

- 세부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칭짙(靑藏)철도, 南水北調사업, 화이허(淮河)치수공정 등이 계획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 o 또한, 오염된 저수지 개선, 농촌지역의 도로건설과 음용수 안전문제, 석탄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지역관리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음.

<표-2> 중국의 국채발행 추이와 GDP 대비 중앙재정적자의 비중

연도	장기건설국채 (억RMB)	중앙예산적자 (억RMB)	GDP (억RMB)	GDP 대비 중앙재정적자의 비중 (%)
1998	1,000	960	78,345	1.2
1999	1,100	1,797	82,068	2.2
2000	1,500	2,598	89,468	2.9
2001	1,500	2,598	97,315	2.7
2002	1,500	3,098	105,172	2.9
2003	1,400	3,198	117,252	2.7
2004	1,100	3,198	136,515	2.3
2005	800	3,000	150,167	2.0

□ 통화안정정책의 실시

- 통화정책 수단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신용대출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임.
- 2005년 통화량(M1)과 총통화량(M2)은 각각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선 상업은행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개선하며,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금융서비스환경을 개선함.
- 중장기 대출의 증가폭을 통제하고, 소모성 사업과 공해산업 등 국가산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통제함.

## 5. 《반국가분열법》 제정의 의의

- 《반국가분열법》은 “평화통일, 일국양제(一國兩制)”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양안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임.
  - 특히 《반국가분열법》은 전체 중국인민이 국가주권과 영토를 보호하고, “대만독립”을 허용치 않겠다는 공통된 의지와 굳은 결심을 나타냄.
- 한편, 금번 전인대에서는 중국의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이 평화발전을 위한 것이며 자주적이고 독립된 평화외교정책을 전개할 것임을 재차 강조함.
  - 또한, 대외개방을 견고히 유지하고 경제글로벌화와 지역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II. 토론 요지

問 : 지난 3월 7일 쑹페이옌(曾培炎) 부총리가 전인대 해남도(海南島)대표단과의 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의 거품방지를 위해 부동산 가격인상 폭을 3%대로 통제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일부 정협위원들이 부동산시장 통제에 따른 시장위축을 우려하고, GDP 성장률과 비교할 때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7~8% 인상폭까지 인정할 것을 주장함.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망은?

답 :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자동차산업과 함께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임. 이는 주민소득의 증가와 소비구조의 향상을 나타내는 것임. 그러나 2004년 부동산투자의 급증은 철강·시멘트산업에 대한 투자 급증을 야기하고 부동산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구축함. 즉, 실용적인 주택건설은 여전히 부족한 반면, 고급주택 위주의 건설 붐이 발생한 것임. 이에 지난해 상해의 중심지와 주변지역 부동산가격이 각각 28%와 15.8% 증

가함. 이는 인민폐 평가절상을 예상한 투기성 자금의 유입이 커졌음을 의미함. 그러나, 부동산가격 3% 인상 통제선은 물가상승률 4%에 비해서도 너무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7~8% 인상도 가능하다고 봄. 다만, 부동산가격은 정부정책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임.

최근 중국정부는 투기적 성향이 짙은 부동산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대출시 선납금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대출금리도 인상함. 또한, 상해의 경우, 부동산 구입후 1년 안에 전수(轉手)판매된 부동산거래에 대해 중과세하기로 결정함.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가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임.

問 : 거시조정정책 중 금융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외자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금리인상과 환율제도의 변화임. 향후 예상되는 금리인상과 환율제도의 변경 시기와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금융지표는 무엇인가? 또한, 금년 중 금리인상과 환율제도의 변경 가능성은?

답 : 금리의 변동문제는 시장화 추세로 나아갈 것임. 예측가능한 국내 지표로는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금리의 조정 가능성은 크나, 만일 금리가 조정되더라도 소폭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환율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은 美달러화의 평가절하 여부임. 이는 수출입의 확대로 인해 인민폐와 달러의 연동 폭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임. 현재 중국내에서는 첩예한 의견대립 속에 인민폐 평가절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다만, 최근에 원자바오 총리가 '환율제도 변화'가 전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한 바 있음.

問 : 발표자께서는 부동산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최근 중국정부는 주택자금 대출시 선납금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주택구입 1년내 재거래시 중과세한다고 발표함. 그런데, 부동산 투기업자에게 있어서 대출금리와 세금인상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과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 비록 부동산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는 하지만, 정부조치에 따른 일부 영향도 예상됨. 예를 들면, 토지용도의 제한을 들 수 있음. 현재 북경지역내 별장건설은 제한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30일 이후 토지이용에 대한 비준심사를 강화함. 부동산에 대한 자본금 사용 비율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시장자체의 부동산가격 억제 기능도 존재함. 예를 들면, 북경의 고급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통제도 여러 차례 있었음. 이로 인해 투자원가가 상승되고 투자리스크도 높아졌음. 그밖에 달러 금리인상에 따라 투자방향이 부동산투자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問 : 전력공급문제가 지난해부터 매우 심각함. 외국인투자기업(특히 첨단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한 생산 및 제품품질 유지가 중요함. 전력공급문제와 관련한 중국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 : 정부의 대책을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발전소건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예를 들면, 2004년 발전량은 과거 20,000만 KW의 두배를 넘어서는 50,000만 KW에 달함. 둘째, 전력공급의 우선순위를 지역별 선정에서 업종별 선정으로 전환함. 현재 전력자원 낭비가 큰 산업과 오염산업에 대해 제한적인 전력공급을 실시하고 있음. 반면에 첨단 기술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전력공급은 크게 강화함.

問 : 중국의 4대 은행 중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은 이미 주식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음. 은행간의 특성은 있겠으나, 향후 공상은행과 농업은행에 대한 주식제개혁 추진 계획은?

답 : 지난해 주식제개혁을 통해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은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공상은행과 농업은행의 주식제 개혁을 위한 사전준비작업도 진행 중에 있음.(\*\*\*)